

[ 해: 기호와 사유 ]

## <세월호 참사에 숨겨진 정치적 프레임>

2013\*\*\*\*\* 차지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 있은 후 갑작스럽게 닥친 희생에 온 국민은 유족들과 슬픔을 공유했고,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느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져있었다. “도대체 무슨 진상조사를 더 하라는 걸까? 휴...”, “지겨울 뿐이다. 4월은 온전히 그냥 4.19만 기억하련다.”, “그만해라 지겹다.”, “8억이면 엄청난 건데..”, “교통사고 나도 진상규명하자.”... 이것은 모두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실린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sup>1)</sup> 이처럼 온 국민의 슬픔이자 분노였던 세월호 참사를 한순간에 ‘지겨운 것’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돈 달라는 행위’로 읽으려는 흐름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한 흐름에 일조한 것이 ‘누구’인가는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바로 정부, 여당, 그리고 언론이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의 국면 속에서도 온갖 ‘은유’와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하여 사건을 왜곡시키고 은폐했다. 여기서 은유와 프레임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sup>2)</sup> 이다. 이 때 다른 종류의 사물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이해방식이 변한다는 것이 바로 ‘프레임 이론’이다. 은유적 체계성이 개념의 다른 측면들을 은폐 한다는 특성<sup>3)</sup> 역시 우리 뇌에서 특정 프레임이 활성화된 이상 그 프레임대로 사고한다는 프레임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지 설득력 있고 공감되는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저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프레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지난 해 7월 24일,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라는 발언을 한다. 곧이어 새누리당에서는 끊임없이 교통사고, 해상교통사고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한다.<sup>4)</sup> 이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권이 처음 구축한 은유이다. 이 같은 프레임은 도대체 어떤 측면을 부각하고, 또 어떤 측면을 은폐하고 있는 것일까. 조지 레이코프는 ‘세금구제’라는 용어가 “세금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 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그를 방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다.”라는 은유를 탄생시킨다고 말한다.<sup>5)</sup>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를 완벽하게 ‘사고’의 체계에서 바라보도록 이끌며 다음과 같은 은유를 탄생시킨다. “세월호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세월호 사건은 비교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다.”, “세월호는 단순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 “세월호는 각종 행정절차

---

1) 황인호, [세월호 1년, 갈등을 넘어 치유로] “아빠 왔다, 잘 있니? 아빠는 안 울어”... 사고 해역 찾은 유가족들, <국민일보>, 2015.04.16. 02:39,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id=005&aid=0000761216&date=20150416&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36](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id=005&aid=0000761216&date=20150416&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36)

2) G. 레이코프, M. 존슨, 노양진, 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도서출판 박이정, 2006, p.24.

3) 위의 책, p.31.

4) 김진우, “[세월호특별법 논란]‘교통사고론’은 여권의 방패막이”, <경향신문>, 2014.08.20. 22:03: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02203485&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02203485&code=910402)

5) G. 레이코프,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삼인, 2006, pp.24-25.

와 규율에 따라 대응하고 종결지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성된 은유들은 사건에 대한 여러 본질을 흐트러뜨린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단순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을 밝혀냈다.<sup>6)</sup>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다. 사고가 나기 2주전부터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의 전원접속에 이상이 있었으며, 배가 10도 넘게 기울어지며 휘청거리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결국 세월호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닌, 어쩌면 예견된 사건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은유에 의한 이해방식은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은폐한다. 단순사고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만 존재할 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사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한 구조대처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는 그 책임 대상에서 한 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책임의 축소는 언론의 ‘책임 프레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프레임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모두 선장과 선원들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동아일보> 사설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해 젖은 돈 말리고 있었다니”가 있으며<sup>7)</sup> <조선일보>는 “승객 팽개치고 먼저 배 빠져나간 세월호 선장·선원들”을, <중앙일보>는 “침몰하는 배에서 1호로 탈출한 나쁜 선장”을 기사제목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책임프레임은 재난의 책임자로 선장, 선원들을 부각, 한정시킴으로써 동시에 정부, 국가의 재난대응시스템, 해경, 선박업체의 책임은 무마하고 약화시켰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는 발언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선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경우 이 사건이 단지 개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규정되어 버릴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 그리고 언론이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프레임을 구축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사용한다. 이번 연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여당에서는 “세월호 특위는 세금도둑”이라는 발언이 나왔으며 정부는 이례적으로 유가족들의 배·보상금 총 수령액을 공개했다.<sup>8)</sup> 이렇듯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돈을 언급하며 형성한 세금도둑·돈 프레임은 ‘특위는 남의 세금을 훔치는 나쁜 짓을 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그 세금을 도둑맞는 사람은 곧 국민이다.’, ‘특위의 활동을 제지하는 정부는 영웅이다.’라는 은유를 탄생시키며 국민과 유가족들 간 적대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유가족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은 한순간에 거액의 돈을 손에 넣으려는 탐욕스러운 행태로 변질되고 만다.

이러한 ‘돈(Money) 프레임’ 속에도 교통사고·책임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먼저, 이 프레임을 통해 국가는 자신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가족들의 배·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8

6) “하인리히법칙”,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848&cid=43667&categoryId=43667>

7) “[사설]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해 젖은 돈 말리고 있었다니”, <동아일보>, 2014.04.18. 03:00, <http://news.donga.com/3/all/20140418/62856295/1>

8) 손덕호, “與김재원 "세월호조사위, 세금도둑 작태"...조사위 규모·예산 놓고 '세금도둑' 논란”, <조선일보>, 2015.01.16. 10:5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6/201501160139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6/2015011601396.html)

김준일,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동아일보>, 2015.04.02. 03:00,

<http://news.donga.com/3/all/20150402/70481666/1>

억 2000만원'의 위로금에서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 위자료의 대부분은 일반보험료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실상 정부의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도둑'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대중들로 하여금 진상규명과 공적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는 유가족들의 노력을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여당의 대입 특례 추진에 관한 언급들은 이러한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일조한다.

세월호 사건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라보는 프레임은 언론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동아일보> 사설 "세월호 우울증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때"나 <이데일리>의 "잃어버린 1년..세월호와 함께 경제도 침몰했다"에서 나타나듯이 언론은 '경제 프레임'을 구축한다.<sup>9)</sup> 대통령 또한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하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프레임은 마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되었고,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 마냥 고통 받고 있다는 논리를 부각시킨다. 즉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이슈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대중들에게 세월호 사건은 '탈출'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언론은 수많은 프레임들과 여론몰이를 동원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부각 혹은 왜곡했다. 이로 인해 주된 관심이 책임공방과 세월호 우울증, 피로감, 등에 쏠렸고 책임져야 할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사고 원인조사와 후속 대책마련이라는 본질적 이슈는 흐려지고 말았다. 이제는 진보, 보수 당파 간 이념갈등이나 책임 떠넘기기를 넘어, 본질적인 목표만을 위한 '화합의 프레임'을 새로이 구축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프레임은 어느 사건에나 동원되고 있으며, 프레임이 우리 삶의 깊숙이 박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에 갇힌 채 현상을 바라보게 될 경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통합적 사고', '총체적 사고'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프레임은 가지되, 자신의 사고와 다른 현상이 존재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확인하는 '유연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즉 언제든지 프레임 간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

9) "[사설]'세월호 우울증'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때", <동아일보>, 2014.06.09. 03:00, <http://news.donga.com/3/all/20140609/64103754/1>

<참고문헌>

- G. 레이코프, M. 존슨, 노양진, 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도서출판 박이정, 2006  
G. 레이코프,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삼인, 2006